

K-방산, 유럽 점점 확대... ‘전략적 동반자’ 수출 체질개선

현지기업 플랫폼·공급망 진출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 고도화
“K-방산, 수주흐름 이어질 것”

국내 방산기업과 유럽 방산업체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 기업의 플랫폼에 한국 무기체계를 결합하거나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 방식도 단순 공급에서 전략적 협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유럽 기업과의 공동 개발과 현지 사업을 통해 유럽 시장 공략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의 플랫폼과 영업망을 활용하고, 국내 업체의 검증된 무기체계와 양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열린 유로사토리 2026에서 프랑스 탈레스와 다연장로켓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탈레스의 X-Fire 다연장로켓 플랫폼에 한화의 80km, 160km,



천무 다연장로켓



천공II 사격 이미지

290km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유럽 플랫폼과 한국 유도미사일을 결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의 천무 유도미사일은 국내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받았고 폴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 실적을 확보했다. 탈레스와의 파트너십은 유럽 주요국의 방위산업 블록화에 대응하면서 한화가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유도탄 현지 생산 기반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도 유로사토리 2026에서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방공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사는 유럽 내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LIG D&A의 천공-II와 L-SAM 등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해 통합 방공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거리 방공(SHORAD)용 신규 미사일 체계 공동 개발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유럽 방산시장 확대는 국내 업체와 유럽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향후 5년간 약 두 배 늘어 2030년 8000억유로(약 140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공망과 장거리 타격체계, 탄약 생산능력 확충 수요가 커지면서 검증된 무기체계와 생산 역량을 갖춘 국내 업체와의 협력 여지도 넓어지고 있다.

유럽 내 방산 공급망 강화 기조도 진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의 유럽 사업은 완제품 수출이나

현지 생산시설 구축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에는 유럽 기업의 플랫폼에 국내 유도미사일을 통합하거나 방공체계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기업은 플랫폼과 영업망, 현지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업체는 무기체계와 양산 역량을 결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이 자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에는 모든 수요를 역내에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공동 개발과 현지 사업을 앞세운 협력 모델이 유럽 시장 공략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이 역내 조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자체 공급망으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검증된 무기체계와 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산업체를 찾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동결해야” vs “대폭 인상”

(경영계)

(노동계)

경영계 “고용감소 등 부작용 초래”
노동계 “생계비 간극 매년 벌어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로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소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대비 1680원(16.28%)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월급(215만6880원)보다 약 35만 원 많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탄신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류 사무총장은 “2026년 불가상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운데),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경수 수습기자

승물을 고려한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215만원과 약 67만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처럼 생계비와 최저임금과의 간극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올해만큼은 전년 대비 저율 인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2000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임을 다시 한번 밝

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에 다다른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전하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와 무더기 폐업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다.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며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해서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인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더 내놓으라고,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라며 “동결안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화하고 한계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에 다다른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전하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와 무더기 폐업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다.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며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해서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인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더 내놓으라고,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라며 “동결안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화하고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유지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맞섰다.

양육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이 갹내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인상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느냐는 질문에는 신규채용 줄이거나 기존 인력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며 “지불능력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과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열리는 첫 전원회의로, 통상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hys@

이학찬·박경수·채리나 수습기자



정책금융기관, 한·미 조선협력 투자 ‘시동’

주요 조선사 업무협약 체결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조선사 간 한·미 조선협력 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1500억 달러(231조 원) 규모의 조선 부문 투자의 이행을 위한 행보다.

정책금융기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참여했다. 조선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함께했다.

협약을 계기로 공사, 정책금융기관, 조선사 등 협약 당사자들은 한미 조선협력 투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기관 상호 간 정보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이 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 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조선3사간 한미 조선협력투자 MOU 체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사를 맡아 대내외 소통과 사업 추진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수은 본점

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조선 협력 투자는 대미 투자와 함께 한미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며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 조선사-기자재 협력업체까지 우리 조선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일감과 시장을 얻는 호혜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함께 나눠 질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설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나아가 민간금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순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찬성표 비율은 92.03%(3만 4371명)를 기록했다.

현재 노조는 올해 협상안으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신규 인력 충원, 완전월급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 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성과급을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 배급(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

